

# 공주민제(DCA) 관점에서 본 6인의 미래경제 구상과 한계

켈소 · 샌더스 · 올트만 · 양 · 머스크 · 하사비스

— ‘세금-복지’가 아니라 ‘지분-의결-책임’으로 설계하는 노동 이후  
의 사회

이○연

2025.12.27 · 초안 v1.0

## 발행 정보

저자: 이○연

발행일: 2025.12.27

버전: 초안 v1.0

용도: 연구·토론용 원고(출판 편집 전).

권장 인용문: 이○연. (2025). 『공주민제(DCA) 관점에서 본 6 인의 미래경제 구상과 한계』(초안 v1.0).

키워드: 공주민제, DCA, 자본접근권, 분산 소유, 분산 의결, ESOP, 기본소득, 포획

Disclaimer: 본 문서는 의견서/연구 원고이며, 특정 인물·기업·단체에 대한 법률·재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.

## 목차

- 요약: 6 인의 구상과 공주민제의 응답
- 1. 문제설정: 노동 이후, 자본접근권 0, 포획
- 2. 평가기준: DCA 렌즈(C1~C7)
- 3. 6 인의 사상과 한계
- 4. 공주민제의 설계: 분산 소유·의결·책임
- 5.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
- 6. 정책 패키지 체크리스트 및 로드맵
- Executive Brief (English)
- 부록 A. 용어(요약)
- 부록 B. 참고문헌 및 자료

## 요약: 6 인의 구상과 공주민제의 응답

이 소책자는 6 인의 대표적 담론(자본대중화, 민주사회주의적 기업개혁, 기술-기본소득, 기술-가속주의, 책임 있는 AGI)을 공주민제(DCA: Distributed Citizen Assets) 관점에서 비교-평가하고, 공주민제가 그들의 '핵심 한계'를 어떻게 설계로 해결하려 하는지 정리한다.

평가의 관점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'노동이 더 이상 사회통합의 중심 장치가 되기 어려운 조건'에서, 자본접근권(=자본을 소유할 기회와 경로) 0 상태를 제거하고, 소유·의결·책임을 분산시키며, 포획(capture)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이다.

본 문서는 출판용 편집을 염두에 둔 원고 형태이며, 인용·사실관계·표현은 추가 교정과 보강이 필요하다.

### 핵심 결론

켈소는 '자본소득의 대중화'라는 문제의식을 제도 도구(ESOP)로 구현했다 [R1][R18][R19]. 샌더스는 '기업 민주주의'로 의결권 문제를 전면화했다 [R14][R15]. 올트만·양은 AI 충격을 '현금 바닥(UBI)'으로 완화하려 했다 [R7][R5][R6]. 머스크는 노동소멸의 속도와 규모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며 UBI/UHI 를 언급했다 [R2][R3][R4]. 하사비스는 '책임 있는 AGI'의 규범과 안전 담론을 강화했다 [R10][R11].

그러나 이들 접근은 공통적으로 '보편 소유+보편 의결+보편 책임'의 통합 설계가 약하다. 공주민제(DCA)는 이를 '시민 자본계정'과 '분산 의결(프록시)' 및 '포획 방지·리스크 완충'으로 묶어, 노동 이후의 유효수요와 정치적 안정, 인간의 발언권을 동시에 설계한다 [R20][R21].

## 한 장 요약 매트릭스(초안)

인물	핵심 기여	DCA 관점 핵심 한계	DCA 설계 해법 (요약)
루이스 켈소	핵심 주장 / 핵심 처방	근로자-기업 중심: ESOP 는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작동한다. 노동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적용 범위가 구조적으로 축소된다. · 의결권/거버넌스의 제약: ESOP 는 ‘자산 형성’에는 기여하지만, 기업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민주화되는지(이사회, 의결권 구조)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.	공주민제는 ‘직장 기반 소유’가 아니라 ‘시민 기반 소유’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. · ESOP 도구는 유지하되, 시민 전체에 대한 자본접근권 0 제거(시민 자본계정, 공적 자본의 시민 환류, 분산투자)를 상위 구조로 설계한다.
버니 샌더스	핵심 주장 / 핵심 처방	노동자 범위의 한계: 고용 기반 제도이므로 비정규·플랫폼·실업 상태의 시민을 포괄하기 어	공주민제는 샌더스의 ‘의결권 민주화’ 문제의식을 계승하되, 단위를 노동자에서 시민으로

샘 올트만

핵심 주장 / 실천

럽다.·대립적  
정치경제: 강제  
이전으로 인식  
되면 반발이 커  
지고, 기업이 고  
용을 외주화하  
거나 계약직으  
로 전환해 회피  
할 유인이 생긴  
다(정책 내재적  
회피 리스크).

확장한다.·기  
업 단위의 강제  
이전 대신, 공적  
자본과 세제·규  
제의 '자동 배  
분'으로 시민 계  
정을 축적시키  
고, 그 지분이  
기업 지배구조  
에 반영되도록  
의결권 신탁/대  
리 체계를 설계  
한다.

현금은 '소유'가  
아니다: UBI 는  
소비를 지지하  
지만, 자본소득  
(배당·이자·자본  
이득)의 생성 구  
조와 의결권 구  
조를 바꾸지 못  
한다.·정치 의  
존성: UBI 는 조  
세·이전의 정치  
적 합의가 필요  
해, 정권 교체나  
재정 긴축 국면  
에서 쉽게 후퇴  
할 수 있다.

공주민제는 '현  
금 이전'보다 '사  
전 분배(pre-  
distribution)'  
를 중시한다.  
즉, AI 생산수단  
의 소유권을 시  
민 계정으로 먼  
저 분산시켜 배  
당이 자동 발생  
하게 만든다.·  
디지털 ID/거버  
넌스는 민간 독  
점이 아니라 공  
공-시민-민간이  
분권적으로 운  
영하는 표준(공

개 규격, 감사를  
내장)으로 설계  
한다.

앤드류 양

핵심 주장 / 핵  
심 처방

소비 기반 분배  
의 한계: VAT-  
현금은 소비를  
지지하지만, 생  
산수단 소유·지  
배구조를 바꾸  
지 못한다. · 인  
플레이션·가격  
전가 논쟁: VAT  
와 현금 이전이  
가격에 전가될  
경우, 실질 효과  
가 약화될 수 있  
다(정책 설계에  
따라 달라지나  
논쟁이 지속).

공주민제는  
VAT 같은 조세  
를 '소비 보전'에  
만 쓰지 않고,  
일정 비율을 시  
민 자본계정에  
자동 적립해 '배  
당 기반 소득'으  
로 전환하는 설  
계를 포함한다.  
· 현금 바닥은  
전환기 안전망  
으로 활용하되,  
장기적으로는  
시민의 자본소  
득이 주된 기반  
이 되도록 설계  
한다.

일론 머스크

핵심 주장 / 담  
론의 힘

전환기 제도 공  
백: '필요하  
다'는 진단은 강  
하지만, 누가 무  
엇을 어떻게 소  
유하고 어떤 절  
차로 분배·의결·  
감독할지 설계

공주민제는 머  
스크가 강조한  
'전환기 공백'을  
제도 설계로 메  
운다: 기술·자본  
의 소유권을 시  
민 계정으로 분  
산시키고, 의결

가 부재하다. · 권과 책임을 함께 분산한다. · 소유의 재집중을 방지: 현실의 특정 기업가·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, 공적 자본과 시민 자본계정의 '상호 견제'를 설계한다.

데미스 하사비스

핵심 주장 / 조직적 실천

사기업 중심 거버넌스: '책임'이 기업 내부 위원회와 자율 규범에 기대는 순간, 외부 민주적 통제는 제한된다. · 가치의 귀속 문제: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잉여가 주주·플랫폼에 집중될 수 있으며, 공익 담론과 분배 현실의 괴리가 생긴다. 공주민제는 '책임'의 담론을 '소유와 의결의 구조'로 연결한다: 공익을 말하는 조직의 성과가 시민 자본계정에 환류되는 구조가 있을 때 책임은 지속 가능해진다. · 기업 내부 자율규범을 넘어, 시민-국가-민간의 다층 감시(감사, 공개지표, 독립평가)를 제도화한다.





## 1. 문제설정: 노동 이후, 자본접근권 0, 포획

AI·로봇·플랫폼화는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, 소유 구조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소득과 권력이 더 빠르게 집중될 수 있다.

공주민제는 다음 전제를 둔다.

- 노동소득 중심 분배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.
- 자본소득이 늘어도 '자본접근권 0'인 다수가 그대로 남으면, 분배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불안정해진다.
- 기술 발전의 혜택은 '소유와 의결' 구조로 귀속된다. 따라서 소유·의결을 설계하지 않으면 윤리·복지 논쟁은 제자리걸음을 한다.
- 정책은 종종 포획된다. 따라서 '좋은 의도'가 아니라 '나쁜 유인에도 견디는 구조'를 설계해야 한다.

## 2. 평가기준: DCA 렌즈(C1~C7)

본 소책자는 다음 기준으로 6인의 구상을 평가한다.

C1. 자본접근권 0 해소 — 시민 대다수가 '자본을 살 기회' 자체가 없는 상태(신용·계정·규모·리스크 부담 부재)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가.

C2. 소유의 분산 — 소유가 특정 계층·세대·지역으로 재집중되지 않도록 자동 안정장치(누진, 상한, 자동 배분, 상속/이전 규칙)를 갖는가.

C3. 의결의 분산 — 지분만 분산되고 의결이 집중되는 '명목 소유' 문제를 해결하는가(의결권 신탁, 대리투표, 이중 의결 제한 등).

C4. 책임의 분산 — 리스크와 부채가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는가(레버리지 규제, 손실흡수, 안전장치, 감독).

C5. 포획 방지 — 정치·관료·기업·플랫폼에 의한 제도 포획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가(투명성, 감사, 분권, 공개 API, 시민감사).

C6. 노동 이후의 유효수요 — 임금이 감소해도 소비·투자·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'소득의 근원'을 설계하는가.

C7. 국제확장성 — 국가 단위에서 시작하되, 글로벌 자본·플랫폼 환경에서도 실현 가능한가.

## 3. 6 인의 사상과 한계

### 루이스 켈소 (Louis O. Kelso)

*‘자본 소득의 대중화’를 제도도구(ESOP)로 설계한 선구*

#### 3.1 핵심 주장과 공헌

- 핵심 주장: 생산은 노동과 자본 두 요소가 함께 만든다. 기술 진보로 자본의 기여가 커질수록, 자본 소유의 확대 없이는 분배 정의가 붕괴한다(이른바 ‘이중요소/바이너리 경제학’).
- 핵심 처방: 차입(leveraged)과 세제·신탁 구조를 이용해 노동자가 기업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ESOP 를 제도화했다. (1956 년 Peninsula Newspapers 사례, 1974 년 ERISA 체계 내 ESOP 정착)
- 공헌: ‘노동=유일한 참여’라는 통념을 깨고, ‘소유(자본) 참여’를 정책 언어로 만들었다.

#### 3.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

- 근로자-기업 중심: ESOP 는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작동한다. 노동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적용 범위가 구조적으로 축소된다.
- 의결권/거버넌스의 제약: ESOP 는 ‘자산 형성’에는 기여하지만, 기업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민주화되는지(이사회, 의결권 구조)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.
- 리스크 편중: 한 기업의 지분에 근로자 자산이 과집중될 수 있고, 경기·산업 충격이 생계와 자산을 동시에 타격한다.
- 세제 기반 확산의 한계: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 접근성이 핵심이어서, 금융·정치 환경이 불리하면 확대가 정체된다.

#### 3.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

- 공주민제는 ‘직장 기반 소유’가 아니라 ‘시민 기반 소유’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.

- ESOP 도구는 유지하되, 시민 전체에 대한 자본접근권 0 제거(시민 자본계정, 공적 자본의 시민 환류, 분산투자)를 상위 구조로 설계한다.
- 기업 단위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‘국가/시민 단위 인덱스(분산)’ + ‘민간(직장/조합) 단위 집중’을 혼합하는 2 층 구조를 제안한다.

## 버니 샌더스 (Bernie Sanders)

*‘기업 민주주의’로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민주사회주의적 기업개혁*

### 3.1 핵심 주장과 공헌

- 핵심 주장: 불평등의 뿌리는 기업 권력과 부의 집중이다. 정치 민주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며, ‘직장 내부의 민주주의’가 필요하다.
- 핵심 처방: ‘Democratic Employee Ownership Funds(노동자 소유 펀드)’를 통해 기업 지분을 단계적으로 노동자 집단에 이전(최대 20%)하고, 노동자 이사회 참여·선거를 강화한다.
- 공헌: ‘의결권’과 ‘기업 지배구조’를 분배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.

### 3.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

- 노동자 범위의 한계: 고용 기반 제도이므로 비정규·플랫폼·실업 상태의 시민을 포괄하기 어렵다.
- 대립적 정치경제: 강제 이전으로 인식되면 반발이 커지고, 기업이 고용을 외주화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해 회피할 유인이 생긴다(정책 내재적 회피 리스크).
- 국가 자본-시민 자본 연결 부족: 공적 자본(연기금, 국부펀드 등)을 시민 개인의 자본계정으로 환류시키는 설계가 명시적으로 약하다.
- 글로벌 자본 환경: 다국적 기업, 해외 상장, 조세 회피 구조에서 국내 노동자 중심 설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.

### 3.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

- 공주민제는 샌더스의 ‘의결권 민주화’ 문제의식을 계승하되, 단위를 노동자에서 시민으로 확장한다.

- 기업 단위의 강제 이전 대신, 공적 자본과 세제·규제의 '자동 배분'으로 시민 계정을 축적시키고, 그 지분이 기업 지배구조에 반영되도록 의결권 신탁/대리 체계를 설계한다.
- 회피(외주화)를 막기 위해 고용형태가 아니라 '매출·자본·플랫폼 지배력' 등 경제적 실체를 과세·규제 기준으로 삼는 설계를 병행한다.

## 샘 올트만 (Sam Altman)

*AI 혁신을 전제로 한 '기술 재분배'(UBI/현금 이전) 구상*

### 3.1 핵심 주장과 공헌

- 핵심 주장: AI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올리지만, 소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. 이를 보완하려면 기본소득 등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.
- 실천: 보장소득 실험(OpenResearch) 지원, 그리고 '인간 증명'(World ID 등) 같은 디지털 인프라에 관심을 보여 왔다.
- 공헌: 테크 엘리트 내부에서 불평등과 재분배를 공개 의제로 올렸다.

### 3.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

- 현금은 '소유'가 아니다: UBI는 소비를 지지하지만, 자본소득(배당·이자·자본이득)의 생성 구조와 의결권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.
- 정치 의존성: UBI는 조세·이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, 정권 교체나 재정 긴축 국면에서 쉽게 후퇴할 수 있다.
- 디지털 인프라의 사유화 위험: '인간 증명/ID'가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면, 분배 인프라 자체가 새로운 포획 지점이 된다.
- 글로벌 문제의 국내적 해법: AI 가치사슬은 글로벌인데, 분배는 국가 재정에 묶이면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.

### 3.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

- 공주민제는 '현금 이전'보다 '사전 분배(pre-distribution)'를 중시한다. 즉, AI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시민 계정으로 먼저 분산시켜 배당이 자동 발생하게 만든다.
- 디지털 ID/거버넌스는 민간 독점이 아니라 공공-시민-민간이 분권적으로 운영하는 표준(공개 규격, 감사를 내장)으로 설계한다.
- 국가별로 출발하되, 글로벌 인덱스 자산 및 국제 협약을 통해 '자본소득의 국제적 공유'로 확장 가능한 경로를 제시한다.

### 앤드류 양 (Andrew Yang)

*자동화 충격에 대비한 보편적 현금 바닥(UBI)과 소비세(VAT)*

#### 3.1 핵심 주장과 공헌

- 핵심 주장: 자동화가 일자리를 잠식하는 속도가 사회 적응 속도를 앞지른다. 최소한의 안정적 현금 바닥(월 1,000 달러 등)이 필요하다.
- 핵심 처방: 'Freedom Dividend(보편 기본소득)' + VAT(부가가치세)로 재원을 마련하고, 일부 복지와 선택적으로 통합한다.
- 공헌: 대중 담론에서 AI-실업-기본소득 연결을 구체적 정책 패키지로 제시했다.

#### 3.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

- 소비 기반 분배의 한계: VAT-현금은 소비를 지지하지만, 생산수단 소유·지배구조를 바꾸지 못한다.
- 인플레이션·가격전가 논쟁: VAT와 현금 이전이 가격에 전가될 경우, 실질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(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지나 논쟁이 지속).
- 정치·재정 지속성: 경기 침체나 재정 압박 때 '현금'은 표적이 되기 쉽다.
- 자본시장 편입의 부재: 시민이 자본소득을 갖도록 만드는 '계정-자산-배당' 구조가 약하다.

### 3.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

- 공주민제는 VAT 같은 조세를 '소비 보전'에만 쓰지 않고, 일정 비율을 시민 자본계정에 자동 적립해 '배당 기반 소득'으로 전환하는 설계를 포함한다.
- 현금 바닥은 전환기 안전망으로 활용하되,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자본 소득이 주된 기반이 되도록 설계한다.
- 가격전가 위험은 분산투자 배당과 결합해 완화한다(소비자=주주가 되면 가격 상승의 일부가 배당으로 환류).

### 일론 머스크 (Elon Musk)

*AI-로봇이 만드는 '풍요/일자리 소멸'을 강조하되 제도 설계는 미흡*

#### 3.1 핵심 주장과 공헌

- 핵심 주장: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더 잘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, 기본소득 또는 '보편 고소득'이 필요해질 수 있다.
- 담론의 힘: '노동의 소멸' 전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, 속도와 규모의 충격을 강조한다.
- 공헌: 문제의식(일자리 소멸)을 대중과 정책권에 강하게 주입했다.

#### 3.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

- 전환기 제도 공백: '필요하다'는 진단은 강하지만, 누가 무엇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떤 절차로 분배·의결·감독할지 설계가 부재하다.
- 소유의 재집중을 방치: 현실의 머스크식 기업가-주주 모델은 오히려 자본 집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.
- '의미' 문제의 방기: 일자리 상실 이후 인간의 의미·권리·정치적 발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제도 설계가 약하다.
- 기술과 권력의 결합 위험: 플랫폼/로봇/데이터 인프라를 가진 소수가 국가 기능을 대체하거나 포획할 위험이 있다.



### 3.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

- 공주민제는 머스크가 강조한 '전환기 공백'을 제도 설계로 메운다: 기술-자본의 소유권을 시민 계정으로 분산시키고, 의결권과 책임을 함께 분산한다.
- 특정 기업가·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, 공적 자본과 시민 자본계정의 '상호 견제'를 설계한다.
- '의미' 문제는 배당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, 시민의 참여(의결, 감시, 지역 프로젝트 투자) 구조를 함께 포함한다.

### 데미스 하사비스 (Demis Hassabis)

*'책임 있는 AGI'와 과학적 진보를 결합한 기술·윤리적 테크노크라시*

#### 3.1 핵심 주장과 공헌

- 핵심 주장: AGI는 거대한 혜택과 리스크를 동시에 갖는다. 안전·윤리·책임을 내장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.
- 조직적 실천: 대형 연구조직의 거버넌스(안전위원회, 원칙, 심의 구조)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, 과학·의료·기후 등 '공익적 응용'을 강조한다.
- 공헌: '안전/책임' 담론을 기술개발 내부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.

#### 3.2 공주민제 관점의 한계

- 사기업 중심 거버넌스: '책임'이 기업 내부 위원회와 자율 규범에 기대는 순간, 외부 민주적 통제는 제한된다.
- 가치의 귀속 문제: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잉여가 주주·플랫폼에 집중될 수 있으며, 공익 담론과 분배 현실의 괴리가 생긴다.
- 국가·군사 연계 리스크: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'책임 있는 AI'가 국가안보 논리로 흡수될 수 있다.
- 투명성의 한계: 안전을 이유로 한 비공개가 반복되면, 사회적 신뢰 기반이 약화된다.

### 3.3 공주민제의 설계적 응답

- 공주민제는 '책임'의 담론을 '소유와 의결의 구조'로 연결한다: 공익을 말하는 조직의 성과가 시민 자본계정에 환류되는 구조가 있을 때 책임은 지속 가능해진다.
- 기업 내부 자율규범을 넘어, 시민-국가-민간의 다층 감시(감사, 공개 지표, 독립평가)를 제도화한다.
- AGI의 공익성과 국제협력은 '보편 소유'의 기반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.

## 4. 공주민제의 설계: 분산 소유·의결·책임

공주민제(共株民制)·DCA(Distributed Citizen Assets)의 핵심은 '세금·복지의 사후 분배'가 아니라 '소유·의결·책임의 사전 분배'이다.

노동소득이 사회 통합의 중심이던 시대에는, 임금과 조세가 분배의 주 회로였다. 그러나 AI·로봇·플랫폼화로 노동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국면에서는, 임금·조세 회로만으로는 유효수요와 정치적 안정, 그리고 인간의 의미를 지탱하기 어렵다.

따라서 공주민제는 다음 3가지를 한 세트로 설계한다.

- 1) 분산 소유: 시민 각자가 “자본계정”을 통해 사회 전체의 자본(기업/국가/공공자산)에 자동으로 지분을 가진다.
- 2) 분산 의결: 시민의 지분이 실제 의결권으로 연결되도록 대리(프록시)·신탁·투표 시스템을 설계한다.
- 3) 분산 책임: 레버리지, 손실, 정보 비대칭이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·투명성·위험완충을 제도화한다.

요지는 '기회자본의 사회화(자본접근권 0 제거)'이며, 이는 몰수가 아니라 배분 규칙의 재설계다 [R20].

### 4.1 제도 아키텍처(요약)

#### A. 시민 자본계정 (Citizen Asset Account)

모든 시민에게 1인 1계정의 '자본계정'을 부여하고, 공적·사회적 자금의 일부가 이 계정에 자동 적립되도록 한다. 계정은 분산투자(인덱스)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.

#### B. 공적 자본의 시민 환류

국부펀드·연기금·공공기금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'시민 계정'에 귀속시키는 규칙을 만든다. 복지의 일부를 '배당'으로 전환하는 통로다.

### C. 민간 영역의 연계(ESOP/노조/조합)

직장·조합 단위의 주식축적(켈소의 ESOP, 노동조합의 장기 매수 등)을 시민 계정의 상위 구조와 연결해,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분산 지분을 강화한다.

### D. 분산 의결 메커니즘

직접투표만이 아니라, 시민이 신뢰하는 대리인(전문가/단체/지역)을 선택해 의결권을 위임·철회할 수 있는 '유동적 대리(프록시) 민주주의'를 결합한다.

### E. 포획 방지와 책임 구조

공개지표, 독립감사, 이해상충 규정, 상한/누진 규칙, 리스크 완충(보험·기금)을 통해 제도 포획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한다.

## 4.2 왜 '배당(자본소득)'이 핵심인가

- 현금 이전은 정치에 취약하지만, 배당은 '소유권'에서 자동 발생한다.
- 배당은 유효수요를 지탱하면서도 생산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.
- 소비자=주주가 되면 가격·이윤·분배 갈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(경쟁정책과 독점 규제 병행 필요).
- 배당만으로는 '의미'와 '발언권'을 보장하지 못한다. 그래서 공주민제는 분산 의결과 시민감사를 결합한다.

## 5.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

### 5.1 실현 가능성(정치·재정·법·기술)

#### 정치적 실현 가능성

‘세금 증세 vs 복지 확대’의 이념 대립 대신, ‘국민도 주주가 되는 구조’라는 넓은 연합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. 노동자(안정), 중산층(자산형성), 자영업·중소기업(수요 안정), 국가(재정 안정성) 모두가 일부 이익을 가진다.

#### 재정·금융 가능성

기존의 공적 자산(연기금/기금), 자본시장(인덱스), 조세(부가가치·디지털·자본이득 일부) 등을 조합하면 ‘초거대 증세’ 없이도 초기 축적이 가능하다. 핵심은 ‘수익의 귀속 규칙’을 바꾸는 것이다.

#### 법·제도 가능성

사유재산을 몰수하지 않고, 공적 자금의 운용 및 배분 규칙을 변경해 시민 귀속을 확대하는 방식은 헌법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. 다만 의결권 신탁·대리 체계는 공정성·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설계해야 한다.

#### 기술적 가능성

계정·배당·투표는 디지털 인프라로 구현 가능하다. 그러나 기술은 수단이며, ‘공공 표준·감사·프라이버시’가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포획을 강화할 수 있다.

#### 국제 환경

단일국가 실험은 가능하나,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덱스 자산, 조세 협력, 디지털 신원 표준 등 국제 연계가 필요하다.

## 5.2 타당성(규범적 정당성)

- 자유의 확장: 소유는 선택과 자율의 물질적 기반이다. ‘노동을 통해서만’ 자유를 얻는 구조가 약화될 때, 소유 접근권을 보편화해야 한다.
- 민주주의의 보강: 자본 집중은 정치 포획으로 이어진다. 분산 소유의 결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한다.
- 효율성: 보편적 자본계정은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, 혁신의 수혜가 사회에 환류되도록 한다.
- 안정성: 유효수요 붕괴·불평등·포폴리즘의 악순환을 완화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인다.

## 5.3 반론과 위험(요약)

- ‘국가가 주주가 되면 사회주의 아닌가’라는 반론: 공주민제는 몰수가 아니라 공적 자본의 수익 귀속 규칙과 시민 계정을 통한 분산 소유를 강조한다 [R20][R22].
- ‘의결권이 포폴리즘에 휘둘린다’는 반론: 프록시(위임·철회), 전문성 기반 대리, 독립감사, 이해상충 방지로 완충해야 한다.
- ‘재집중’ 위험: 상속·양도·대형 자본의 우회 지배를 막는 상한·누진·투명성 규칙이 필수다.
- ‘기술 인프라 포획’ 위험: 디지털 계정·ID·투표 시스템은 공개 표준과 감사를 내장해야 한다.

## 6. 정책 패키지 체크리스트 및 로드맵

### 6.1 정책 패키지 체크리스트

- 시민 자본계정 법제화(대상, 권리, 상속·양도 규칙, 개인정보/프라이버시)
- 공적 자본의 시민 귀속 규칙(국부펀드·연기금·공공기금 수익 배분) [R22].
- 분산투자 원칙과 리스크 규정(인덱스 기본, 집중 제한, 손실흡수 장치)
- 분산 의결 인프라(프록시 위임/철회, 투명한 투표 기록, 이해상충 공개)
- 포획 방지 장치(독립감사, 공개지표, 시민감사단, 로비·회전문 규제)
- 시장 경쟁정책(독점·플랫폼 지배력 규제와 병행)
- 전환기 안전망(단기 현금 바닥 + 직업전환·교육)과의 정합성

### 6.2 단계별 로드맵

#### 0 단계: 개념-언어의 정착

공주민제의 핵심(자본접근권 0 제거, 분산 소유·의결·책임)을 정책 언어로 정리하고, 공적 자본의 시민 환류 원칙을 사회적 합의 의제로 올린다.

#### 1 단계: ‘시민 계정’의 법제화 및 파일럿

출생/성인 전환 시점에 계정 부여, 공적 기금 수익의 일부 자동 적립, 소액 배당 지급 등 최소 기능을 시범 도입한다.

#### 2 단계: 공적 자본 운용규칙 개편

국부펀드·연기금·국민성장펀드 등 공적 자본의 목적함수에 ‘시민 귀속’

항목을 포함하고, 투명한 성과지표와 독립감사를 도입한다.

### 3 단계: 민간-공적 연계 강화

ESOP/노조 장기 매수, 지역 시민펀드, 플랫폼 수익 공유 등을 시민 계정과 연결해 자본소득 기반을 확대한다.

### 4 단계: 분산 의결의 정교화

프록시 민주주의(위임·철회), 공론장, 이해상충 방지 체계, 시민감사 제도를 결합해 '지분=권력' 구조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.

### 5 단계: 국제 협력

국제 인덱스·데이터/AI 가치에 대한 국제적 공유 규칙을 모색한다(협약, 공동펀드, 상호인정 표준).

## 6.3 국제 비교: 국부펀드/배당의 힌트

공주민제는 기존 제도를 '해체'하기보다, 이미 존재하는 공적 자본을 시민 귀속으로 재설계하는 경로를 중시한다.

- 노르웨이 국부펀드(GPFG)는 전 세계 상장기업의 평균 약 1.5%를 보유하는 대형 분산 투자자다 [R12][R13]. 다만 귀속은 '국가'에 집중되어 있다.
-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자원 수익을 장기 투자해 배당(PFD)을 지급하는 대표 사례다 [R16][R17]. 배당은 가능하나, 기업 의결권의 민주화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.



## Executive Brief (English)

### Executive Brief (English)

Title: Distributed Citizen Assets (DCA) as an Ownership-First Social Contract for the Post-Labor Economy

#### Problem

Automation and AI compress labor demand while amplifying returns to capital and platforms. If income distribution relies mainly on wages plus politically fragile tax-transfer schemes, societies face (i) collapsing effective demand, (ii) escalating wealth-and-power concentration, and (iii) institutional capture by dominant asset owners.

#### Core Idea

DCA reframes “socialization” as the socialization of opportunity to own capital—not expropriation. It is a pre-distribution system that institutionalizes:

- 1) Distributed ownership: every citizen has a capital account that automatically accumulates diversified equity claims on national and corporate assets.
- 2) Distributed voting: ownership is linked to real governance via proxy/mandate mechanisms, preventing “nominal ownership with concentrated control.”
- 3) Distributed responsibility: leverage, losses, and information asymmetry are constrained so risks are not dumped onto weaker citizens.

Why DCA differs from six common approaches

- Kelso (ESOP/binary economics): powerful tools, but employment-

based and firm-concentrated; DCA makes ownership citizenship-based and diversified.

- Sanders (workplace democracy): strengthens worker voice, but leaves non-workers and global value chains under-addressed; DCA universalizes ownership beyond employment status.
- Altman/Yang (UBI/cash transfers): stabilizes consumption, but does not change who owns and governs productive assets; DCA creates automatic dividend income tied to ownership.
- Musk (abundance narratives): strong diagnosis, weak transition governance; DCA fills the institutional vacuum with rules, oversight, and anti-capture design.
- Hassabis (responsible AGI): ethics without democratic ownership can still concentrate value; DCA aligns “benefit to humanity” with asset-flow rules and civic oversight.

### Implementation (high-level)

Phase 1: Legalize citizen capital accounts; route a defined share of public fund returns (sovereign funds, pension funds, public endowments) into accounts.

Phase 2: Build transparent governance: independent audits, public metrics, conflict-of-interest rules, and proxy-voting infrastructure.

Phase 3: Link private sector mechanisms (ESOPs, cooperatives, citizen funds) to the citizen account layer.

Phase 4: Expand internationally via index exposure and interoperable digital identity standards governed by public law.

### Feasibility

DCA can start without confiscation. It primarily changes the rules of allocation and beneficiary rights for public capital returns and

selected tax streams (e.g., VAT/digital rents) to seed citizen accounts. The political coalition is broader than “tax-and-spend,” because citizens experience tangible capital ownership and dividend flows.

#### Claim

In a post-labor transition, durable stability requires an ownership-first settlement. DCA provides a concrete, institutionally implementable blueprint for distributing not only income, but also control and responsibility.

## 부록 A. 용어(요약)

- 공주민제(共株民制): 시민이 '주식(지분)'을 공동으로 소유하고, 그 소유가 의결과 책임으로 연결되는 사회 운영 원리.
- DCA (Distributed Citizen Assets): 시민에게 분산된 자산(지분) 구조를 통해 소득·권력·책임을 분산시키는 설계 개념.
- 자본접근권 0: 자본을 소유할 기회·경로·신용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상태.
- 사전 분배(Pre-distribution): 사후 조세-복지 이전 이전에, 소유권/시장 규칙 자체를 바꿔 분배 결과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접근.
- 포획(Capture): 정책·감독·제도가 특정 이해집단(기업/관료/정당/플랫폼)에 의해 장기적으로 좌우되는 현상.
- 프록시 민주주의(유동적 대리): 시민이 직접투표 대신 신뢰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고,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방식.

## 부록 B. 참고문헌 및 자료

웹 자료의 접속일: 2025.12.27

[R1] Kelso Institute, “Binary Economic Modes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Assets”.

<https://kelsoinstitute.org/louiskelso/publications/papers/binary-economic-modes-for-the-privatization-of-public-assets/>

[R2] World Government Summit Observer, “Elon Musk on why the world needs a universal basic income” (2017).

<https://www.worldgovernmentssummit.org/observer/articles/detail/elon-musk-on-why-the-world-needs-a-universal-basic-income>

[R3] Fortune, “Elon Musk says AI will remove need for jobs, create ‘universal high income’” (2023-11-06).

<https://fortune.com/2023/11/06/elon-musk-ai-artificial-intelligence-universal-income-jobs/>

[R4] Business Insider, “Elon Musk says AI and robotics will make money ‘irrelevant’” (2025-11).

<https://www.businessinsider.com/elon-musk-robotics-money-irrelevant-currency-universal-basic-income-2025-11>

[R5] Yang2020, “The Freedom Dividend”.

<https://2020.yang2020.com/policies/the-freedom-dividend/>

[R6] Yang2020, “Value-Added Tax”.

<https://2020.yang2020.com/policies/value-added-tax/>

[R7] TIME, “Read TIME's Interview With OpenAI CEO Sam Altman” (2023). <https://time.com/6288584/openai-sam-altman-full-interview/>

[R8] Reuters, “Sam Altman's rebranded Worldcoin ramps up iris-scanning crypto project” (2024-10-17).

<https://www.reuters.com/technology/artificial-intelligence/sam-altmans-rebranded-worldcoin-ramps-up-iris-scanning-crypto-project-2024-10-17/>

[R9] Reuters, “Worldcoin must delete all iris scan data, watchdog says” (2024-12-19).

<https://www.reuters.com/markets/currencies/spanish-watchdog-tells-worldcoin-delete-all-iris-scan-data-2024-12-19/>

[R10] Google DeepMind, “About Google DeepMind”.

<https://deepmind.google/about/>

[R11] The Verge, “Google scraps promise not to develop AI weapons” (2025). <https://www.theverge.com/news/606418/google-ai-principles-weapons-surveillance>

[R12]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, “The fund's value” (average ownership 1.5% of listed companies).

<https://www.nbim.no/en/investments/the-funds-value/>

[R13]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, “Investments” (portfolio breadth, ownership share).

<https://www.nbim.no/en/investments>

[R14] Washington Post, “Sanders offers corporate governance plan” (2019-10-13).

[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politics/2019/10/13/5565adae-edd8-11e9-8693-f487e46784aa\\_story.html](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politics/2019/10/13/5565adae-edd8-11e9-8693-f487e46784aa_story.html)

[R15] The Next System Project (Democracy Collaborative), “Plans advance for democratizing worker ownership” (2019).  
<https://thenextsystem.org/learn/stories/plans-advance-democratizing-worker-ownership>

[R16]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(APFC), APFC overview (Permanent Fund purpose and governance). <https://apfc.org/>

[R17] State of Alaska Department of Revenue, “Department of Revenue Announces 2024 Permanent Fund Dividend Amount and Energy Relief” (2024-09-19). <https://dor.alaska.gov/department-of-revenue/news-detail/2024/09/19/department-of-revenue-announces-2024-permanent-fund-dividend-amount-and-energy-relief>

[R18] IRS, “Retirement plans definitions” (ESOP definition; ERISA overview). <https://www.irs.gov/retirement-plans/plan-participant-employee/retirement-plans-definitions>

[R19] U.S. Department of Labor, “What You Should Know About Your Retirement Plan” (ERISA overview).  
<https://www.dol.gov/node/63395>

[R20] 이○연, 『공주민제(DCA) 선언』 (2025.12.03.) (내부 문서).

[R21] 이○연, 『공주민제라는 이름의 뜻』 (2025.12.26.) (내부 문서).

[R22] 이○연, 『한국형 국부펀드·국민성장펀드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대안(제안)』 (2025.12.21.) (내부 문서).

[R23] 이○연, 『마르크스주의의 자기갱신과 반동화의 위험』 (2025.12.14.) (내부 문서).